

공 개



의안번호	제 6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2. 19. (제 3 차)	

(주)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2. 19.

1. 의결주문

(주)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 제출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2018.2.26.~2018.4.20. 및 2018.5.2.~2018.5.11. 기간 중 (주)대구은행에 대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및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으로 통보하고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에 대하여 관련 직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련 법규 : <붙임 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은행법」 제48조(검사), 제69조(과태료)
- 「은행법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 부서 협의

☐ 금융감독원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2019.10.31.) 심의필

<별지>

(주)대구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가.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 임직원에 대한 조치

성명	조치내용
前 은행장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前 부행장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前 부행장보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前 부행장보 ▼▼▼·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 조치 사유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 법적 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나.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 직원에 대한 조치

성명	조치내용
부장 △△△	과태료 5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 사유 :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 법적 근거
 - 「은행법」 제48조(검사), 제69조(과태료)
 - 「은행법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조치사유

가.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거나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주)대구은행 은행장 ○○○ 등 임원 ××명은 대구은행 前 은행장 ×명 및 ●●● 임원 ×명과 함께

- ××××.×.×. ■■■지점이 ◆◆◆에 판매한 수익증권(“○○○○채권투자 신탁×-×호”, 원금 ××억원)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주1)}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 요청^{주2)}에 따라 ××××.×월초 투자손실금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주3)}하고

* 주) 1. ××××.×.×.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및 동 수익증권에 편입된 □□□ 회사채의 부실문제 등으로 자산운용사가 환매유예를 결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정상적인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 기간 중 ×회에 걸쳐 환매대금 총 ××.×억원을 지급받아 투자원금(××억원) 중 나머지 ××.×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

2. ◆◆◆은 투자손실 발생으로 문책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지점 직원에게 투자원금의 반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 결산감사 과정에서 투자손실 발생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수익증권 및 정기예금 잔액확인서 등의 발급을 요구하여

이에 ■■■지점 직원은 ××××.×.×. 수익증권의 투자손실로 환매되지 않은 잔액에 대하여 허위의 ‘정기예금증서 발급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등 ××××.×.×.~××××.×.×. 기간 중 허위의 수익증권 및 정기예금 잔액확인서 등을 수차례에 걸쳐 부당 발급해 주었으며,

××××.×월경 ◆◆◆은 ×개월 후 인사 이동을 앞두고 ■■■지점 직원에게 수익증권 투자손실 문제의 해결을 요청

3. ■■■지점 직원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손실 문제를 인지하게 된 은행장 등 임원 ××명은 임원회의 등을 통해 논의 후 투자손실금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

- 개인별 부담액을 정해 자금을 각출*하여 ××××.×.×. 수익증권 투자자인 ◆◆◆에 투자손실보전 금액 ××.×억원과 이익 ×억원 등 총 ××.×억원을 사후에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 전·현직 은행장은 각각 ×억원, 임원은 각각 ××~××백만원을 부담










< 관련 법규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내역

(단위 : 원)

소속	성명	당시 직위	일자	금액
대구은행		前은행장	xxxx. x. xx.	200,000,000
		前은행장	xxxx. x. xx.	200,000,000
		은행장	xxxx. x. xx.	200,000,000
		부행장	xxxx. x. xx.	62,281,073
		부행장보	xxxx. x. xx.	55,000,000
		부행장	xxxx. x. xx.	62,280,000
		부행장보	xxxx. x. xx.	55,000,000
		부행장보	xxxx. x. xx.	55,000,000
		부행장보	xxxx. x. xx.	55,000,000
		부행장보	xxxx. x. xx.	55,000,000
		부행장보	xxxx. x. xx.	55,000,000
		부행장보	xxxx. x. xx.	55,000,000
		부사장	xxxx. x. xx.	60,000,000
		부사장	xxxx. x. xx.	55,000,000
계 (①)				1,224,561,073
손실보전 금액*(②)				1,018,320,052*
이익 제공 금액 (③=① - ②)				206,241,021

* 투자금액 xx억원 - 환매금액 x,xxx,xxx,xxx원

나.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 「은행법」 제48조(검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 ××××.××월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당시,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전형에서 합격한 ★★ ★의 채용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 '××.××.×. ~ ××.××. 기간 중 실시된 경영실태평가 검사

- 前 인사부장 △△△은 최종면접에서 ★★ ★의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정 前 평가점수를 검사반에 제출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 최종면접 평가등급 : 상향 조정 前 (×, ×, ×) → 상향 조정 後 (×, ×, ×)

< 관련 법규 >

- 「은행법」 제48조(검사), 제69조(과태료)
- 「은행법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붙임1)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 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이하 생략)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별표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등의 사유

56. 제5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 (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17.4.18.>

□ 舊 「자본시장법」 (‘14.12.30. 이전)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 제1항 제1호·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2947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4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의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 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별표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제387조 제3항 관련)

99. 법 제420조제3항제5호(기관경고)·제6호에 따른 조치.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 법 제422조제1항(임원제재)제4호(주의적경고)·제5호(주의)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2항(직원제재)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요구(정직~주의)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요구(법 제422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2. 법 제4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조치내용의 기록·유지·관리, 같은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422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또는 조치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이하 기재 생략)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

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 「은행법」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4826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제1항·제2항, 제52조의2제1항제3호, 제69조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舊 「은행법」 (‘17.10.19. 이전)

舊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신설 2017. 4. 18.>

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舊 「은행법」 (‘17.10.19. 이전)

舊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은행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7.10.19. 이후)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하. 은행이 법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2항	3,000
러. 은행이 법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의3	6,000
머. 은행이 법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의4	6,000
버. 은행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의5	10,000
서.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4항제5호	2,000
어. 법인인 자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8호	10,000
저.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8호	5,000
허.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9조 제4항제7호	200
고.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4항제8호	200

□ 舊 「은행법시행령」 ('17.10.19. 이전)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파.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4호	100
하.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4호	250
거.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5호	500
너. 법인인 자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8호	5,000
더.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8호	2,500
서. 은행이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11호	1,000
어.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7호	100
저.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8호	10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2. 28., 2004. 3. 5.>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개정 2006. 8. 31.>
 -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06. 8. 31.>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06. 8. 31.>
 - 다.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업무를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6. 8. 31.>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개정 2006. 8. 31.>
 - 가. 삭 제 <2006. 8. 31.>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06. 8. 31.>
 -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营业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경우로서 위법·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위법·부당행위 중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5. 계약이전의 결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6.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금융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위법·부당내용을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기타 언론에 공표하거나 영업점에 게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기관경고

-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개정 2016. 3. 22.>
-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6) 위법·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다. 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 (1) 당해 금융기관의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하 같다)의 100분의 2 (자기자본의 100분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가)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나)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이상 2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300억원

(다) 자기자본이 2조5천억원 이상인 경우 : 500억원

- (2) 손실(예상)금액이 (1)에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중대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라. 삭 제 <2004. 12. 30.>

마. 삭 제 <2004. 3. 5.>

8. 삭 제 <2004. 3. 5.>

9. 기관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신설 2005. 8. 31.>

-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권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개정 2004. 3. 5., 2005. 8. 31., 2010. 11. 12.>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2. 28., 2004. 3. 5.>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3. 12. 20.>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들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개정 2016. 3. 22.>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신설 2005. 8. 31.>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 8. 31., 2010. 11. 12.>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④ 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동항제2호의 조치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조치와 동항제2호의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2.>

⑤ 금융위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 3. 22.>]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6. 3. 22.>]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8. 31., 2010. 11. 12., 2014. 11. 4.>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 9. 14.>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4. 3. 5., 2014. 11. 4., 2015. 9. 14.>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1. 4., 2016. 3. 22.>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28., 2010. 11. 12., 2014. 9. 1., 2017. 10. 1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9. 1.>

1. 삭 제 <2017. 10. 19.>

2.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6호 라목의 (1)(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또는 마목의 (2), (4) <개정 2017. 10. 19.>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4. 위반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 9. 1., 2017. 10. 19.>

④ 삭 제 <2001. 2. 28.>

⑤ 삭 제 <2001. 2. 28.>

⑥ 삭 제 <2001. 2. 28.>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9.>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9.>

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2. 27.>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7., 2005. 8. 26., 2006. 8. 31., 2008. 12. 31., 2014. 7. 23., 2014. 10. 31., 2015. 6. 24., 2016. 3. 15.>

1. <삭제 2014. 10. 31.>

2. <삭제 2014. 10. 31.>

3. <삭제 2014. 10. 31.>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와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양정결과가 견책요구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4. 2. 27., 2008. 12. 31., 2014. 7. 23., 2014. 10. 31. 2015. 6. 24., 2016. 3. 15.>

1. <삭제 2016. 3. 15.>
2. 금융관련법규상 신용공여 금지위반 또는 한도초과 행위, 금융투자업자의 증권 임의 매매·불공정거래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무자격모집위탁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한 행위 <개정 2006. 8. 31., 2008. 9. 1., 2008. 12. 31., 2010. 8. 31., 2014. 7. 23., 2014. 10. 31.>
3. 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감독 및 검사 방해·거부·기피 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개정 2006. 8. 31., 2010. 8. 31., 2014. 7. 23., 2014. 10. 31.>
4. <신설 2014. 7. 23., 삭제 2014. 10. 31.>
4.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한 사항에 대해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자율적인 제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0. 8. 31., 2014. 7. 23., 2014. 10. 31., 2015. 6. 24.>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개정 2010. 1. 5., 2014. 7. 23.>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개정 2010. 1. 5., 2015. 6. 24.>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개정 2010. 1. 5.>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개정 2010. 1. 5., 2014. 7. 23.>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개정 2010. 1. 5.>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개정 2010. 1. 5.>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5., 2010. 8. 31., 2014. 7. 23.>

제46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이미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재한다.

1. 추가 발견된 위법·부당행위를 종전 제재시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추가 발견된 위법·부당행위를 종전 제재시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종전 제재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받았을 제재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 5.]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제조치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0. 1. 5.]

제50조(직원제재의 감면) ① 제45조에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제재를 양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 4. 30., 2014. 7. 23.>

1. 위법·부당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
2. 위법·부당행위를 부서 또는 영업점에서 발견하여 이를 보고한 감독자
3. 감독기관의 인지 전에 위규사실을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자
4. 가벼운 과실로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자
5. 금융분쟁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자 <개정 2004. 4. 30.>

6. 규정 제2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재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정하는 "제재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제재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제재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금융관련 범죄와 제45조 제1항 제5호의 "주의"조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20., 2014. 7. 23.>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금융위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양정을 감경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공적은 제외한다. <신설 2001. 8. 17.>

1. 제재대상 직원이 "주의"조치 이외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재 이전의 공적<개정 2009. 10. 20.>
2. 제재대상 직원이 소속 금융기관 입사전에 받은 공적
3. 검사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이내에 받은 것이 아닌 공적<신설 2009. 10. 20.>
4. 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공적<신설 2009. 10. 20.>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 2. 27., 2010. 1. 5.>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 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3. 15.>

-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5.>

-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와의 관여 정도

<별표 2>

제재양정기준

위법·부당의 정도 유형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하 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 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	해임권고(면직)	해임권고(면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	해임권고(면직)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키는 행위	"	해임권고(면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당해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	"	"
직무태만	"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
기타 위법	"	"	"

(붙임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주)대구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2.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 2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 4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 4명 ▪ 감봉3월 : 1명 ▪ 견책 : 4명 ▪ 주의 : 4명 ▪ 과태료 500만원 부과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금융
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거나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주)대구은행 은행장 ○○○ 등 임원 ××명은 대구은행 前 은행장 ×명 및 ●●● 임원 ×명과 함께

- ××××.××.××. □□□지점이 ◆◆◆에 판매한 수익증권(‘○○○채권 투자신탁×-×호’, 원금 ××억원)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 요청에 따라 ××××.×월초 투자손실금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하고

* ××××.××.×.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및 동 수익증권에 편입된 □□□ 회사채의 부실문제 등으로 자산운용사가 환매유예를 결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 ××××.×.××. 기간 중 ×회에 걸쳐 환매대금 총 ××.×억원을 지급받아 투자 원금(××억원) 중 나머지 ××.×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

- 개인별 부담액을 정해 자금을 각출*하여 ××××.×.××. 수익증권 투자자인 ◆◆◆에 투자손실보전 금액 ××.×억원과 이익 ×억원 등 총 ××.×억원을 사후에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 전·현직 은행장은 각각 ×억원, 임원은 각각 ××~××백만원을 부담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20조, 제422조, 제424조

(2)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 「은행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은행 임직원은 양도성예금증서 등 유가증권의 발행·매매 등의 업무를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취급함으로써 재무제표 분식 및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은 ◆◆◆이 결산감사 과정에서 ××××.××.××. ◆◆◆이 투자한 수익증권(“○○○○채권투자신탁×-×호”)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잔액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 ××××.××.××.~××××.××.××. 기간중 ◆◆◆의 요청에 따라 ◆◆◆의 결산시점에 허위의 수익증권 및 정기예금 잔액 확인서 등을 수차례에 걸쳐 부당 발급함으로써 ◆◆◆의 재무제표 분식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내역

구분	발급일자	확인서 종류	관련금액
1	××××.××.××.	수익증권 가입사실 확인서	××억원
2	××××.××.××.	수익증권 잔액(가입) 확인서 1부	××억원
3	××××.××.××.	정기예금증서 발급사실 확인서 2부	××억원, ××억원

< 관련 법규 >

1. 「은행법」 제34조, 제54조, 제52조의2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
3.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4.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3)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및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1조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 ××××.××월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당시,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전형에서 합격한 ★★의 채용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 前 인사부장 △△△은 최종면접에서 ★★의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정 前 평가점수를 검사반에 제출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 최종면접 평가등급 : 상향 조정 前 (×, ×, ×) → 상향 조정 後 (×, ×, ×)

< 관련 법규 >

1. 「은행법」제43조의2, 제48조, 제54조, 제69조
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40조, 제41조

나. 경영유의사항

(1) 공금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은행은 공공금고 업무 수행을 위해 통합금고관리시스템(舊 금고 보고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일 세입 및 세출 등의 변동금액을 반영한 세입세출일계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나
- 실적배당 상품의 경우 자산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투자원금 기준으로만 세입세출 일계표를 작성하여 평가손익에 관한 재무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적배당 상품의 평가손익 등 재무정보가 적시에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일계표 등의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영업점 자점감사 항목 및 본점 검사부의 검사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공공금고 업무의 적정 여부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사고 등의 보고 철저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및 제42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소속 임직원이나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장에게 금융사고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중요한 사항 또는 사건은 즉시 감독원장에게 주요 정보사항으로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은 ××××.××월경 수사기관이 은행 전·현직 임원들을 ◆◆◆의 수익증권 투자손실금 보전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임원들의 사적인 손해배상 행위로 판단하고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 2018.××.××. 금융감독원에 정보사항 보고, 2018.××.××. 금융사고 보고

- 앞으로 임직원 교육, 감사조직의 역량강화 및 금융감독원과의 의사소통 확대 등을 통해 금융사고 및 중요사건 등이 발생한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속한 보고 및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은행과	특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63 02-2100-2676	02-3145-7205